

민주 전주병 경선 참가 예비후보자들

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공방전'

김성주, "20대로 해달라" 발언 정동영 향해 "걸림돌 되지 않도록 다짐·결단해야"

정동영, "당 선관위서 경고 조치... 많은 걱정 끼친 점 사과, 걱정해 주신 시민께 감사"

더불어민주당 전주병 경선에 참가하는 김성주·정동영 예비후보가 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의혹을 놓고 연일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다.

먼저 정동영 예비후보는 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먼저 많은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면서 "어제(6일) 심야회의를 통해 (자의)발언에 대해 경고조치가 의결됐다"고 했다.

이어 "경선과 상관없는 일로 선거법 위반과 무관하다는 지역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해서 합리적 결정을 내려줬다"며 "당과 걱정해 주신 시민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의 발언으로 불의를 빚은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밖에도 기자회견장에서의 '허위사실공표' 혐의 관련해서는 "당시 그 주제가 아니라 정책발표였는데 느닷없는 질문"이라며 "(당시) 경선이 시작된 이후에 그런 기억이 없어 그런 발언을 한 것"이라고도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주병 김성주 예비후보(사진 왼쪽)와 정동영 예비후보.



정 예비후보는 지난해 12월 13일 200여명이 모인 전주시의 한 행사장에서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지지를 호소했고, 확장장치를 사용해 공식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이 자리에서 정 예비후보는 "여론조사가 실시되면 전화를 받아 연명을

'20대'로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도 고발장에 적시됐다.

여론조사 허위응답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 예비후보자는 지난 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진행 된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사실 여부를 묻는 한 기자의 질문에 "전혀 맞지 않다. 그건 누

가 만들어내는 음해"라고 발언해 또 다시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당내 경쟁자인 김성주 예비후보도 연일 정 예비후보를 비난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 예비후보는 문제의 발언을 인정했지만 진정성 있는 사과 대신 '농담'이라는 말로 청년을 우롱하고 국민을 기만했다"며 "관련 사실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운운하며 겁박하는 것도 맞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예비후보가 앞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전주시민에게 감사드린다'는 발언을 했다 먼저 사과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시민들에게 여론조사에 나이를 속여서 응답하도록 거짓을 유도한 것이 신성하게 되어야 될 선거와 여론조사에서 도덕적으로 정치인에게는 치명타"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정 예비후보자 발언은) 농담으로 보기 어렵다"며 "당과 이재명 대표의 승리를 위해서 나아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다짐과 결단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동영 예비후보에 대해 '경고'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뉴스



전북자치경찰위원회가 7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중회의실에서 '자치경찰권강화 정책 토론회'가 연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장, 강기홍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등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정부,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 청사진 내놔야"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제 시행 3년 맞아 '자치경찰권 강화 방안' 논의

자치경찰제 시행 3년을 맞아,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이 한데 모여 진정한 자치경찰제 실현하기 위한 '자치경찰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는 7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중회의실에서 '자치경찰권강화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과 관계공무원 등 70여명이 참석했으며, 강기홍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의 특강과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이형규 전북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자치경찰제는 주민 자치의 완결판으로, 현재도가 완전한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한 토론회"라며, "진정한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해 인력·예산·조직이

뒷받침되어 일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도록 행정부가 약속한 이원화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청사진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회장단과 간담을 갖고 "현정부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현행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치경찰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천명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라며 "권한과 책임의 일치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로 나아가길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강기홍 교수는 특강에서 시·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관이 없는 현 자치경찰제는 수급이 채워진 자치경찰제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경찰청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인력·예산·조직을 지자체로 이관하고, 자치경찰사무를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 등 국가법의 개입이 자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순동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회장은 "현 정부에서 민생 등 현안에 밀려 기형적 자치경찰제를 바로잡기 위한 경찰법 개정 등까지 정부의 관심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국시도시찰협의회와 긴밀히 협조해 정부의 국정과제가 현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참석자들은 '법 개정 없이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바꿔야 한다'며, 지구대·파출소를 자치경찰 소속으로 하고, 자치경찰위원회에 실질적인 인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재훈 기자

민주 안호영 의원, 정희균 예비후보 당 선관위 고발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은 7일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정희균 예비후보가 상대 후보에 대해 비방하고, 인신공격 및 허위사실 등을 공표해 공명선거를 저해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정희균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그런(전과) 사안(상해, 음주운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 벌금형 3건의 전과)을 생각해 컷오프" 되었다가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 경선 기회를 부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희균 의원은 "정희균 예비후보가 '허위사실' 관련 윤준병 의원은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안호영 후보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등 근거 없이 의혹만 부풀리고 있다"고 지

적했다.

안 의원은 무엇보다 "정희균 예비후보는 2016년 총선에서 안 예비후보 친형이 후보매수 사건으로 실형을 살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제 친형은 후보매수 사건으로 기소가 된 적이 없고, 2021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어 실형을 살았던 바가 없다"고 밝혔다.

재선 도전' 민주 신영대 의원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통과

군산·김제·부안갑에서 국회의원 재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경선에서 김의겸 의원을 누르고 본선에 진출했다.

7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날(지난 6일) 오후 10시경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4~6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신 의원이 경선에 통과된 배경으로, 지역구 활동 비중이 높고, 자신의 공약 이행을 홍보하며 주민들과 꾸준히 소통하는데 주력해온 결과로, '천명회 재비명회'로 압축되는 민주당 공천 분위기에 힘입어 본선에 진출한 신영대 의원의 분신 진출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도내 정가는 보고 있다.

경선에 승리한 신영대 의원은 "함께 경쟁하신 김의겸 의원에 총선 승리를 위해 검찰특재 총식과 4기 민주당부수립을 위해 손을 맞잡자"고 제안하며, "본인의 압도적인 승리와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역할을 다 하겠다"고 했다.

한편 신 의원은 어르신 무료버스 운행, 달빛어린이병원 유치, 전국체전 유치, 소상공인 특별보증 확대, 30~50대 허리수당 지급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특별취재반

장기철 전 민주 정읍지역위원장 윤준병 예비후보 지지 선언

전 더불어민주당 정읍지역위원장인 장기철 김대중재단 정읍지회장이 7일 오전 "12년 동안 훼손된 정읍 민주당의 재건을 위해 노력해 온 윤준병 예비후보야말로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맞서 싸울 적임자"라며 윤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장 전 위원장 등은 정읍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대한 정체성과 도덕성이 확실하고 의정활동에도 높은 평가를 받은 윤준병 후보의 지지를 결의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 여의도 정치가 국민의 삶과 동떨어졌다는 자기 반성에서 출발한 이재명 대표의 정치교체·정치혁신에서 성품이 감지한 윤준병 후보가 적합한 인물"이라고 했다. /특별취재반

전북자치도의회 임시회 도정 질문

"도정 홍보영상 제작, 특정업체 몰아줬나"

김성수 도의원 "업체명 다르나 주소지 등 같이

유형 업체들이 민간사업자 계약 절반 이상 진행"

김관영 지사 "조사 통해 사실관계 분명히 밝힐 것"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성수(더불어민주당, 고창1) 의원이 7일(목) 제4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에서 도정 및 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도정 홍보영상과 관련된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김성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31개의 온라인 도정홍보 영상 제작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이중 공영방송과의 계약 9건을 뺀 22건의 계약이 민간사업자와 이루어졌다.

이 중 12건이 '씨앤씨 서울', '케이미디어', '코리아워커센터' 등 업체명은 다르지만,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나 약정서상 전화번호가 같은 사실상 경제적 실질공동체와 유사한 업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성수 의원은 "이것 자체만으로도 특정 업체가 회사를 쪼개며 편법적으로 참여한 상황이지만, 더 큰 문제는 주소지 자체가 허위로 신고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수 의원은 "이를 통해 대대적인 홍보 성과가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해당 업체가 제작한 영상은 부정적 논란으로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다"라며, "마지막 폴른스 영상(케이미디어)을 제작한 업체에게 '하태마스튜디오' 홍보 영상(씨앤씨 서울)까지 제작 의뢰하는 일은 유착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해당 업체는 도정 홍보 영상 뿐만 아니라 도가 발주하는 각종 영상 제작에도 참여한 정황이 보인다"며, "비단 온라인 도정 홍보영상 제작에 한정할 것이 아닌 전 분야에 걸쳐 수사 수준의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의혹 제기에도 김관영 도지사는 "제기된 의혹이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한다"며,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밝혀내겠다"고 답했다.

"중자원 고품광이 범씨 사태, 적극 대응을"

김동구 도의원

전북자치도가 최근 국립중자원 전북지원에서 보관 중이던 범씨에서 고품광이 균이 대거 확산된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산림경제위원회 김동구 의원(군산2·더불어민주당)이 7일 제4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국립중자원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대응을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국립중자원 전북지원은 지난해 12월 신종진 범씨 발아 검사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후인 1월 25일야 전북자치도, 도내 14개 시군 등과 처음으로 문제를 공유하고 해법을 논의"했으며, "사고가 발생한 지 석 달이 넘도록 명확한 원인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도내 신종진 버 재배농가

가 전체의 49.3%를 점유하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의 몫으로 남게 되었으며, 올해 도내 신종진 보급금 1,792톤) 대비 42% 수준으로 중자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되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김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일부 농민들은 신종진 품종을 퇴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농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가 우선되어야 하며 전북자치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구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일부 농민들은 신종진 품종을 퇴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농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가 우선되어야 하며 전북자치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훈 기자

건강장애학생 치료 종료 후 학교생활 적응 돕는다

장연국 자치도의원,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등 2건 발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7일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과, 서남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9)과 공동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은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에 대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 △교육지원 계획의 수립 등과 실태조사 △병원학 교·원격수업·순회교육·개별학교



에 관한 사항 △건강장애학생의 성적 및 평가 △건강장애학생 학교폭력 지원 △교육연수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행정적·재정적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다.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은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한 수요조사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한 사업 △지원회의의 심의 △의사소통 지원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다.

한편, 2건의 조례안은 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의안심사하고,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